

브로커에 청탁하고 서류 조작...신재생사업 비리 '천태만상'

감사원 적발 사례 보니...에너지 공기관이 '비리 소굴' 째짜미 계약, 위조서류 제출, 사적 이해관계 미신고 등

감사원이 지난 4개월간 적발해 낸 신재생 에너지 사업 비리 사례를 보면 복마전이였다. 전·현직 공직자와 국립대 교수, 민간업체 등이 한통 속이 돼 별인 사실상 '비리 종합판'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에너지 유관기관 소속 고위공직자가 검직허가 없이 배우자와 자녀 명의로 태양광발전소를 세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가 하면 허위 서류를 제출해 사업 허가를 신청했다. 직무상 권한과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하거나 사적 이해관계 신고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도 수두룩했다.

부산시 부부 공무원과 한국수자원공사 직원이 결탁해 실제 영농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전문브로커를 통해 태양광발전소를 분양 받아 수 억여원을 챙긴 사례도 있었다.

한국에너지공단 부이사장 겸 윤리위원장이던 A씨는 본인 명의로 태양광사업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배우자와 자녀 명의로 3개의 태양광발전소를 추진하면서 시공업체를 직접 찾아 계약을 체결했다.

검직허가 없이 본인이 주도적으로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매출액만 2억7000여만 원에 이른다.

그 과정에서 비농사를 지을 의사가 없으면서도 농업경영을 위해 농지를 취득한다고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 2019년 11월 농지를 취득한 직후 한 달도 되지 않은 그 해 12월 취득 목적과 달리 2개의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했다. 특히 자녀 명의로 태양광발전소는 자녀 취업 등으로 농업인 자격을 상실해 한국형 FIT 계약해지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신고 없이 그대로 내버려 뒀다. A씨는 감사원의 감사

가 시작되자 퇴직했다.

같은 기관 소속인 부장 B씨는 본인이 직접 설비 확인 업무를 담당하면서 알게 된 태양광 시공업체 대표가 소유한 태양광발전소를 6억여 원에 매입하면서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를 하지 않았다. 여기에 본인 명의로 태양광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배우자 명의로 양수한 후 검직허가를 받지 않은 채 2억2000여만 원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

부산시 부부 공무원인 C씨와 D씨 및 수자원공사 직원 E씨는 실제 영농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전문브로커와 접촉해 태양광발전소를 분양받았다. 전문브로커가 허위로 작성해준 농업경영계획서로 한국형 FIT 계약까지 체결했다. 이들이 벌어들인 매출액은 약 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전력공사 소속 대리는 자신의 아버지와 배우자 명의를 차용해 태양광발전소 2곳을 실질적으로 운영해오다 배우자 명의의 발전소가 감사에 적발돼 '건책' 처분을 받아 아버지 명의로 양도했다. 이후 아버지가 사망하자 또다시 본인이 직접 양수받아 총 1억

3000여여원의 부당 이득을 취하다 적발됐다.

◇교수가 허위 사업권 따내 되팔아

국립대 F교수는 허위로 신재생 사업권을 따낸 뒤 수백 배에 달하는 웃돈을 받고 팔았다가 탈미가 잡히기도 했다.

F교수는 2015년 6월부터 친형이 대표인 회사 G사를 사실상 직접 경영하며 그 해 12월 허위 주주명부와 재원조달계획서를 제출해 새만금 풍력사업 허가를 따냈다. 이듬해인 2016년 10월에 실제 이행 의사가 없으면서 새만금개발청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도 취득했다.

이후 2021년 12월 또 다시 허위의 재원조달계획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G사와 친인척 지분 84%를 가진 L사를 양도하는 인가를 받은 뒤 착공조차 하지 않은 채 이듬해 6월 태국계 기업에 5000만 달러를 받고 매각했다. 이는 최초 출자금의 약 600배에 달했다.

◇서류 조작 후 셀프 신청까지

국립농산물관질관리원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업무를 담당하던 직원 G씨는 타인에게 임대해 준 본인 소유 토지에서 농사를 짓는 것처럼 가장 서명을 위조한 후 본인의 경영체 등록신청을 셀프 접수하고 현장조사 담당자와 함께 본인의 농지를 현장조사하는 대담함을 보였다. G씨가 이런 수법으로 태양광발전소 2곳을 세워 7000여만 원을 챙겼다.

태양광 사업자인 H사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경영주 외 농업인 등록을 할 수 없자 배우자의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스캔한 후 컴퓨터로 '경영주 외 농업인 기재란'에 본인 이름을 추가로 표기하는 방식으로 확인서를 위조해 한국형 FIT에 참여하다 탈미가 잡혔다.

태양광 사업자인 I사와 그 가족으로 추정되는 J씨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발급받고 다음 날 스스로 등록을 취소해 농업인 자격을 포기하고도 미리 발급받아 둔 확인서로 10일 후 한국형 FIT에 참여하는 수법을 썼다.

이슬비기자



옮겨지는 수능 문제지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들이 14일 인천 중구의 한 창고에 도착한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문제지와 답안지를 옮기고 있다.

“나 찍어줘” 조합장선거 금품살포 현 조합장, 당선무효형

지지자들과 공모해 11차례 걸쳐 50만원씩 금품살포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한 현직 조합장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지영)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북 모 조합장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A씨와 범행을 공모한 조합 이사 등 지지자 3명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선고됐다. 이 형이 확정될 경우 A씨의 조합장 당선은 무효가 된다. A씨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전 지난 1월28일부터 3월7일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

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지지자 3명에게 선거인들을 직접 만나 자신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면서 각 5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경우 선거인을 만나 “이번 선거 좀 부탁한다”, “선거 좀 도와달라”, “나를 뽑아달라” 등의 이야기를 하며 금품을 건넸다. 직접 금품을 전달하지 못할 경우 지지자들을 통해 금품을 전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특정 지역 내지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등에 따른 조합에서 조합장을 선출하는 선거의 경우 좁은 지역 사회 및 특정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 사이의 촘촘하고 끈끈한 인간관계와 오랜 기간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견고한 인맥 내지 정(情) 문

화를 바탕으로 하여 선거인과 후보자 사이에 금품수수가 이루어지는 일명 ‘금권선거’가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이와 같은 문제를 근절하고 공공단체등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음에도 조합장이 되기 위해 수억원 이상이 필요하거나 조합원들에게 지급되는 금원이 수십만원이라는 특정 기사가 보도될 만큼 조합관련 금권선거문화는 쉽게 사라지지 않고 뿌리 깊은 악습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범행을 한 자들에 대해 엄중한 경고와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의 선거인 매수 정도,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피고인들의 태도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수권기자

광주 도시철도 공사장 상수도관 이탈, 8000가구 단수

14일 오전 7시50분께 광주 남구 백운동 도시철도 2호선 공사현장에서 지름 600mm 크기의 상수도관이 이탈했다.

이 사고로 복구 작업을 위해 물 공급이 일시

중단되면서 남구 월산·사직·백운동과 서구 양동 지역 공동·단독주택 8000가구가 단수됐다.

도시철도 공사장 작업자가 상수도관을 옮기

는 과정에서 관이 이탈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상수도사업본부는 복구 작업을 마치고 이날 오후 물 공급을 재개할 방침이다.

서선욱기자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